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정책소식

2010.6.8

‘서민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기능인 우대정책 강화

보건복지분야 일자리창출지원

신용회복지원확대

청와대 대한민국

-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도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동일한 수준의 병역특례와 보상금 지원

- 간병 · 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돌봄 등 유망한 사회서비스 육성

- 금융채무불이행자도 취업할 수 있도록 채용기업에 기존의 고용보조금 외에 270만 원 추가지급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논의 · 결정된 일자리 대책 | 2010. 5. 27

친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수석비서관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서민생활 안정의 핵심이자 내수 회복의 관건이므로 올해 국정과제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경제성과는 일자리로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그동안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 단기적인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면서 OECD 국가 중 고용위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다행히도 작년 내내 위축되었던 일자리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4월에는 전년동월보다 40.1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이중에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30.3만개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1~2월의 일시적 요인이 완화되면서 빠르게 하락하여 3%대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고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해 가급적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5월 27일 개최된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논의 · 결정된 일자리 대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수 기능인 처우개선 :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도 체육올림픽 메달리스트와 동일한 수준의 병역특례와 보상금 지원

우수 기능인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틀이 되는 핵심 인재로서 이들의 숙련된 기술은 향후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우수 기능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우가 우수 기능인들이 국가 ·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데 걸맞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수 기능인이 우대받고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능올림픽 입상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2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이들이 산업체 또는 기능 관련 근무를 통해 병역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일시보상금도 540만 원에서 1,720만 원씩 올리며, 기능장려금도 연간 최대 624만 원을 증액하여 체육올림픽 입상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능올림픽 금메달 수상자는 년 438만 원을 받고 있지만 이를 년 1,062만 원으로 올린다는 뜻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기능올림픽 금메달 입상자는 김연아 부럽지 않다"고 보도한 배경입니다.

명장에 대한 장려금과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명장의 장려금은 연평균 190만원에서 308만원으로 인상되며, 기능인 분류를 업종별 대분류에서 용접 · 열처리 등 기능별 중분류로 개편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의 행사시 우수 기능인에 대한 포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21개 마이스터고의 지속적인 운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이스터고의 명칭, 교육과정, 교원인사의 자율성 및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입법화할 계획입니다.

기능인력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우선 취업한 뒤 필요할 때 추가적인 학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위취득 경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산업단지나 동일한 업종이 밀집된 지역의 중소기업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주말 또는 야간 2년제 학위과정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학위과정에 명장, 기능올림픽 입상자 등을 강사로 적극 활용하여 보람과 긍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사회서비스 육성 :

병원에서 간병인을 찾아주고 보육시설에서 특기활동 허용

사회서비스는 간병, 보육, 아동 · 장애인 · 노인 돌봄, 방과 후 활동 등 복지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수요가 크고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아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입니다.

우선, 간병서비스의 경우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병원을 통해 간병인을 찾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 경우 간병을 통해 지출된 비용을 의료비 항목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서비스 관련 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추진방법을 공급기관 활용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 노인 돌봄 등에 한정된 바우처 적용방식을 아이돌보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서비스의 경우에도 보육시설 내 특기활동을 허용하여 보육시설 외 학원을 별도로 이용해야 했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특기활동 강사 등 청년의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겠습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

채용기업에 기존의 고용보조금 외에 270만 원 추가 지급

그동안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해 왔으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는 안정적 소득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이 취업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번에 약 200억 원 규모의 취업지원펀드를 금융권이 조성하여 7월 1일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최대 270만 원을 1년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고령자,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도 해당 기업에 1인당 최대 540만 원을 1년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용부담이 총 810만 원까지 완화됩니다.

이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일자리를 찾으면서 빚을 갚고 금융회사는 이를 통해 부실을 털어내며 기업은 채용부담을 더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금융권의 고용보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매월 갚도록 하고, 채무상환을 중단하면 고용보조금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

유망서비스 업종의 일자리 창출을 배가해야

앞으로도 관광 · 레저, 보건 · 의료, 교육 등 유망서비스 업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경제 · 산업 · 노동 · 교육 ·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8일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최중경

1 기능인이 우대와 존중받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 우수 기능인 예우수준 개선

- 기능올림픽 입상자의 보상금 대폭 상향, 병역혜택 부여
- 명장에 대한 장려금 인상
- 우수 기능인 관리체계 및 정부 포상 확대

1. 추진 배경

○ 기능올림픽 입상자는 체육입상자에 비해 일시금은 74%, 장려금은 37% 수준에 불과

〈 금메달입상자 보상금비교(만 원) 〉

기능올림픽(A)		체육올림픽(B)		보상수준(A/B)	
일시금	장려금(평균액)	일시금	연금	일시금	장려금
5,000	443	6,720	1,200	74%	37%

○ ’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 예정임에 따라 국제기능 대회 입상자는 병역특례에서 제외(예술체육입상자는 유지)

○ 기능인으로서 최고 대우를 받는 “명장”의 기능장려금(년 95~285만 원)은 중요무형문화재(년 1,560만 원)의 12% 수준

2. 추진 내용

○기능올림픽 입상자 보상수준을 체육올림픽 입상자 수준으로 상향

- **일시 보상금** : 금 1,720만 원, 은 860만 원, 동 540만 원 각각 인상
- **기능 장려금** :
  - 기 입상자 : 금 443~555만 원, 은 166~209만 원, 동 56~74만 원 각각 인상
  - '11년 이후 입상자 : 체육올림픽 입상자와 동일 수준으로 보상(금메달의 경우 연간 438만 원 → 1,062만 원)

○기능올림픽 입상자 병역혜택 유지(산업체 또는 기능 관련 근무)

○명장의 장려금 인상 : ('10) 년 95~285만 원 → ('15) 년 215~405만 원

○기능인 분류체계 개편 : (현행) 기계 등 업종별 → (개선) 용접 등 기능별

○전국기능경기대회 등 우수 기능인 포상 확대

2. 마이스터고 설립근거 법제화

○마이스터고의 명칭, 교육과정, 교원인사의 자율성 및 행 · 재정적 지원 등을 명확하게 입법화하여 지속적 운영기반 강화

현행	개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령 개정 또는 별도 법률에 반영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불분명하게 규정	• "마이스터고"를 법령상 명칭으로 명시
•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5년단위)만 명시	• 교육과정, 교원인사 자율성, 행 · 재정 지원근거 등 추가

3. 기능인력의 先취업 · 後학업 기반 조성

- 전문계고생의 다양한 학위취득 경로 마련
- 명장, 기능올림픽입상자 등의 기능전수 활성화

○ 전문계고생이 先 취업 후에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사내대학」 운영(주말 또는 야간 2년제 학위과정)

– 명장, 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을 강사로 활용

– 지방중소기업청은 교육장소, 실험장비 등을 무료 지원

○ 고교 졸업생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확대

– 명장, 기능전승자 · 계승자, 중소기업연수원 ·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의 교육이수자도 소정의 학점 부여

○ 명장 등 우수 기능인이 현장 기능인력 및 전문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능전수교육, 진로지도활동 등을 하는 경우 지원

2 보건복지분야의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 간병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비스로 제도화
- 보육시설 내 특기활동을 허용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도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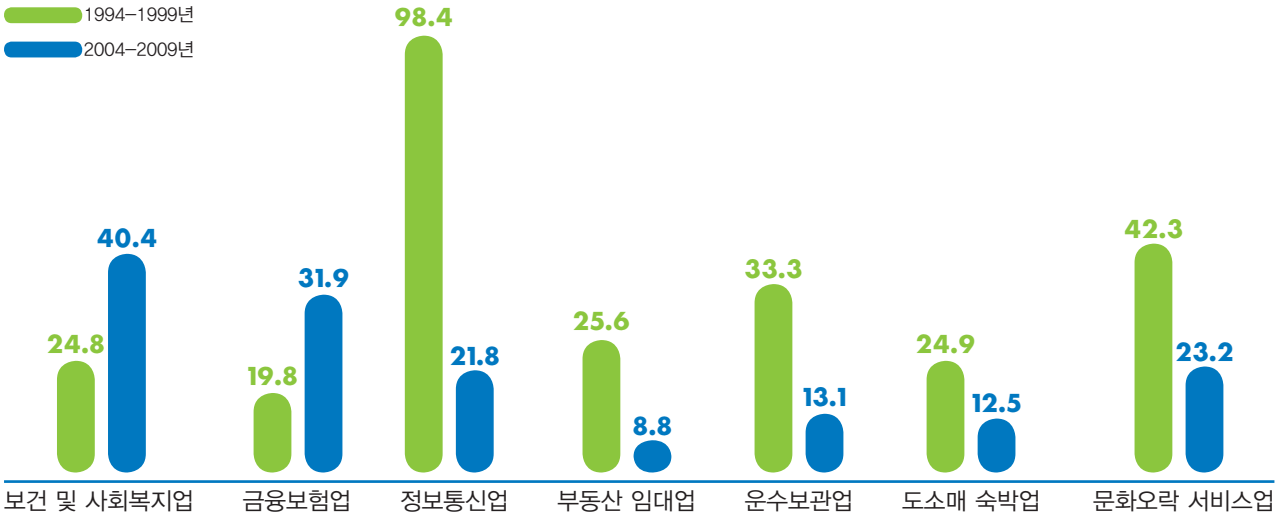
1 추진배경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는 수요가 크고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아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

* 최근 5년간 보건 · 사회복지업의 성장률은 40.4% (전 산업분야 중 1위)

** 취업유발계수(명) : 사회복지 32.7, 보건의료 16.7, 전 산업 13.9, 제조업 9.2('07년)

〈'04 ~ '09 산업별 성장률〉



○그러나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비중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

〈 1인당 GDP 21천 달러 시기의 보건 · 복지분야 고용비율 〉

국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해당연도	2007	1987	1989	1991	1996	1987
GDP($)	21,653	19,910	20,821	22,693	20,990	20,414
고용비율(%)	3.2	4.1	7.7	7.3	10.6	16.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5월)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사회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고용창출력을 제고

2 추진 내용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항목에 포함하여 병원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비스로 제도화

– 환자의 간병비 지출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간병비 부담 경감

○중산층 시장 형성을 위해 돌봄서비스 산업 육성

– 제공기관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서비스 R&D를 신설하여 창업, 인력채용, 노무관리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돌봄서비스 육성법」을 제정하고, 종합 돌봄자격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제도화

○보육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 보육시설 내 특기활동을 허용하여,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 부모의 편의 도모

– 보육료 지원방식을 12시간 종일제에서 시간제(반일제, 시간 연장제, 종일제 등)로 전환하여, 보육료 지원 효율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바탕으로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확충

– RFID를 활용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 · 부당기관 명단 공표 · 행정처분 강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재정 누수요인 최소화

*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 전파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고유의 ID를 식별함으로써, 제공인력의 가정방문 여부를 실시간 확인

○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 육성 하여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

– 대학을 중심으로 한 청년 사업단을 육성하여 지방대학 졸업자 등 취업이 어려운 청년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확충

○ 사회서비스 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

– 우선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공동체를 2014년까지 최대 2천 3백여 개('09년 1.2천개)로 확대

– 사회서비스 분야 정부부처 소관 특성화고를 지정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조기에 양성

– 제공인력 · 기관 · 서비스 질 등에 대한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품질관리 강화

– 언어치료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 신규 자격 도입하고, 잠재수요 · 선진국 자격제도 등을 분석하여 신규 자격 도입 방안(국가 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등)도 마련

3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과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채무불이행자 채용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및 일자리 지원(7월 1일 시행)
-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취업 시 받는 임금으로 채무를 상환
- 채용기업에 정부보조금 외에 금융권 보조금을 1년간 270만 원 추가지급

1 추진배경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사실상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되고 취업에도 애로를 겪는 등 여타 금융소외계층 보다 열악한 상황

○그러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신용회복을 신청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안정적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

* '02년~'09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자 83만 명 중 24만 명(29%)이 채무상환을 지속하지 못해 중도 탈락

○따라서, 일자리 찾기를 통해 경제적으로 보다 확실한 재기 가능

2 추진내용

○ 취업지원 방안

– (구직 · 구인 연계) 신용회복지원기관이 신용회복지원과 더불어, 고용지원센터(Worknet)의 구인정보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 지원

* 금융채무불이행자(193만 명) 및 신용회복지원중인 자(76만 명) 가운데 실직자를 대상으로 지원

– (취업 및 채무조정) 고용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임금의 일부로 채무를 상환토록 하여 신용회복을 지원(채무조정)

– (고용보조금 지급) 채용기업에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외에 금융권 조성 펀드에서 고용보조금을 추가 지급

· 정부의 고용촉진장려금 540만 원 외에 금융권에서 270만 원 지급

○ 사후관리 방안

– 취업한 이후 채무상환시 금융권 고용보조금 수령금액 이상을 상환토록 하며 채무상환을 중단시 고용보조금 지급을 중단